

#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 대한 좌담회

## -제1차 :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의의와 경과-



### 1차 좌담회

- 일 시 : 1992년 2월 13일(목)
- 참석자 : 노재식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위원)  
권숙표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  
노유희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권인혁 (외무부 환경대사)
- 사회자 :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노재식**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위원

이상돈교수:오늘은 권숙표교수님, 노용희교수님, 노재식박사님 그리고 권인혁대사님을 모시고 금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 관한 좋은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리는 유엔환경개발회의는 과연 무엇이며 어떠한 배경으로 회의를 개최하는가에 대해서 노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재식박사: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의 20주년 기념을 위한 행사이고, 1989년 제44차 유엔총회에서 개최가 결의되었습니다. 각국정상이 참석하기 때문에 지구정상회담의 성격이 있고 내

용은 앞으로의 지구환경질서의 기본규범인데 「지구헌장(Earth Charter)」과 「21세기를 향한 실천의제(Agenda 21)」을 채택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실천계획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작성한 「우리의 공동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이름의 보고서의 주된 테마인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입각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후, 대기, 해양 자원, 생물종다양성, 담수, 토양 등의 지구환경요소와 유해폐기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총괄관리체계를 수립하는것이 기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에너지수급동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유전공학에 영향

을 미치게 될 「생물다양성 협약」, 열대삼림의 관리에 대한 「삼림기본지침」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상돈교수:1987년에 UN이 채택한 Brundtland 보고서인 「우리의 공동미래(Our Common Future)」는 과거와는 달리 개발과 환경을 통합시키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금년의 회의는 1972년도의 스톡홀름 유엔환경회의의 20주년되는데에 큰 의미가 있고 과거에는 없던 전 지구적인 문제, 남북간의 격차문제, 국제환경협약의 중요성 부각의 면에서 특색이 있습니다. 노용희 교수님께서 과거 20년동안 대두된 남북간의 문제와 지구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권대사님께서 환경외교와 함께 부각된 국제환경협약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희교수:1972년 스톡홀름회의때만 해도 국제사회는 남북문제뿐만 아니라 동서문제가 개입이 되어서 환경문제에 대한 각국의 대응책이 틀을 잡기 어려웠으나, 금년의 UNCED회의에서는 동·서문제는 탈냉전 시대로 인하여 해결이 되었고 남북문제가 제기가 될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스톡홀름회의때 「유엔인간환경선언」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본 최초의 계기 이었고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1987년 발간한 보고서, 「우리의 共同未來」, 즉

Our Common Future에서 정립된 ESSD(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은 국제사회에서 개발과 환경의 문제를 새롭게 재정립하게 되었고 ESSD운동의 전개로서 범지구적 환경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추세입니다.

권인혁대사: 국제환경협약은 20세기 후반에와서 각광을 받게 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국제환경협약의 내용중에는 선발개도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산업화과정에서 경제발전과 산업육성에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경제산업적인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으며, 그러다보니 선발개도국이 집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물론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인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CFC(염화불화탄소)관련 1,400업체의 50억불 시장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해양과 관련해서 UN이 유자망 조업을 금지해 해양생물자원보존이란 이름아래 우리나라는 140척 어선이 조업을 할 수 없게된 실정입니다. 현재 협상중인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도 CO<sub>2</sub>배출을 규제하는 내용인데, 에너지 소비가 많고 화석연료의 의존률이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는 현재 상태에서 산업재조정이 필요한 단계까지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



노 용 희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임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산업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입니다.

이상돈교수: 금년의 유엔환경개발회의는 국제적인 상황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문제 외에도 과거 20년 동안 우리가 환경향상을 위해 얼마만큼 힘써 왔는가를 반성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과거 20년간의 우리나라의 환경개선 현황에 대하여 권숙표 교수님이,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변천에 대해 노용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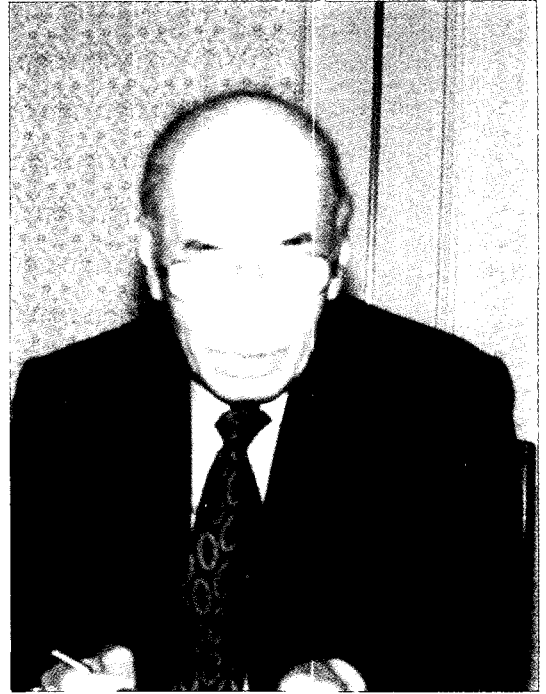
권숙표교수: 먼저 과거 20년간 환경문제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살펴보면, 첫째로 환경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공해방지법」을 만들당시 '환경'은 '오염'을 말하였습니다. 즉, 환경문제는 오염의 문제로 파악하였고 대책도 한정되어 있는 오염을 줄이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생활의 질'의 문제로 까지 확대되었고 최근엔 오염문제가 자원과도 관련되며 개발과 발전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환경문제는 과거 국지적인 문제에서 광역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지구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인접국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국제적인 간섭을 받게도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와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국민의식도 바뀌어 과거에는 환경비용이 발

진을 상쇄한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환경투자의 필요성도  
널리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노용희교수:제가 볼때 우리나라  
의 과거 20년동안 환경정책은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고 봅니다.  
환경청에서 환경처로의 승  
격도 있었고, 법제도「공해방지  
법」하나였던 것이 이제 복수법  
제로서 정비하였습니다.

1972년 스톡홀름회의 당시  
보사부장관이 참가하고 왔지만  
스톡홀름회의 내용을 알리지  
못하던 당시의 환경문제를 터  
부시했던 상황에 비하면 지금  
은 누구나 환경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  
다. 그러나, 전문가입장에서 보  
면 좀 미흡하고, 전문적인 부처



권 숙 표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

“  
국제정치상의 위치에도  
중점을 두어서 지구환경문제에  
있어서 공업선진국과 개발도상  
국을 연결하며 적극적인 해결을  
하고자 하는 리더격 역할을  
말아 해 나갔으면 합니다.  
”

가 보전문제를 거론하더라도  
밖에 부딪히거나 더 나아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를 들면, 금년부터 실시되는 제  
7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전체  
35장 가운데 1개의 장으로 환경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전  
문적으로 전체에 걸쳐야 될 환  
경문제가 아직도 독립된 장으  
로 거론된다는 것은 종래의 양

적성장주의속에서 ‘환경’과 ‘개  
발’에 대한 개념이 ‘보전을 위  
한 개발’보다는 아직도 ‘전면개  
발 부분보전’의 사고방식을 가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분보전은 있으나 개발문  
제를 ESSD적으로 개념을 바꾸  
는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  
다. 어쩔수 없이 20세기가 다  
가기전에, 제8차 경제사회발전  
계획 혹은 3차 국토개발계획이  
수정을 받아야 할 96년 이후의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모두  
가 합심하여 ‘전면보전 부분개  
발’ 방식으로 성장개념을 뒤바  
꾸어 놓을 국민적합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돈교수:이번 회의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탄산  
가스의 방출에 대한 기후변화

협약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노박사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지요.

노재식박사:특별히 CO<sub>2</sub>만을 이  
야기하는 이유를 보면, 지구기  
후를 상승시키는 요인인 온실  
효과가스는 CO<sub>2</sub>뿐만 아니라  
CFC, 메탄, 아산화질소등이 있  
으나, CO<sub>2</sub>를 제외한 나머지 온  
실효과가스는 규제하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에  
너지 산업부분에서 배출하는  
CO<sub>2</sub>량은 세계평균 48%를 차지  
합니다. 그러므로, 기온을 상승  
시키는 효과의 50% 이상을 차  
지하며 에너지와 산업부분에서  
가장 규제하기 쉬운 대상으로  
CO<sub>2</sub>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규정하였습  
니다. 그럼 CO<sub>2</sub>방출을 왜 억제



권인혁  
외무부 환경대사

해야 하는가?

실제로 산업혁명전 지구평균 탄산가스농도는 280ppm이던 것이 1990년에 하와이에서 측정했을때 350ppm을 넘었습니다. 이는 산업혁명전에 비해 25% 증가한 것입니다. 그후 북반구 남반구 구별없이 세계각지에서 1만m 상공의 탄산가스농도는 거의 일률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지금처럼 화석연료에 의존했을 때 21세기말의 기온은 현재보다 2~5℃ 올라가고 기온상승으로 해면수위는 65cm~1m까지 올라갑니다. 또 IPCC는 2030년까지 CO<sub>2</sub>량이 산업혁명전의 2배가 되며 기온이 1.5~4.5℃까지 올라가고 해면수위는 20~140cm가 상승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불확실성이 있다

하여 아직 논란은 있으나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98%가 일치된 견해이므로 무시할 수 없는 예측입니다. 2025년까지 1990년 수준의 CO<sub>2</sub> 배출량을 기준으로 50%를 삭감,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IPCC의 의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간 1~2%씩 CO<sub>2</sub> 배출량을 삭감·안정화시켜야 하는데,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연간 15%를 넘고 1991년도의 경우 16.7% 증가를 기록한 에너지 다소모형 산업구조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CO<sub>2</sub> 배출량을 어떻게 억제하고 안정화시킬수 있는가는 큰 문제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앞으로의 연료및 에너지정책과 더 나아가 산업과 국가발전에 큰 짐이 되므로 정부및 학계, 산업계가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인

데,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돈교수: 유엔환경개발회의 때에는 21세기 인류사회의 행동 지침이라 할 수 있는 「지구헌장」과 「Agenda 21」 채택과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체결외에도 미래환경보호를 위한 일종의 정치적 표명으로서 지구정상회담도 계획되어 있고 세계각국의 민간환경운동 단체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모임도 있으므로 정치적이고 홍보적인 의미도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 대한 우리정부의 접근방향은 어떠하며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권대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CO<sub>2</sub> 배출량을 어떻게 억제하고 안정화시킬수 있는가는 앞으로의 연료및 에너지 정책과 더 나아가 산업과 국가발전에 큰 짐이 되므로 정부및 학계, 산업계가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권인혁대사: 지구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우리의 산업계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환경처에 「지구환경과」와 외무부에 「과학 환경과」를 신설하고 「환경담당 전담대사」를 지정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상 돈  
중앙대 법대교수

올 6월1일부터 개최될 유엔환경개발회의에 대한 준비를 보면, 먼저 3월에 뉴욕에서 마지막으로 열리게 될 제4차 준비회의에 대규모 대표단이 참석하게 되어있고 정부내에 관련부처 대부분을 망라한 범정부적 「UNCED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작년에 1차회의를 가졌고 올 2차회의를 했는데 「Agenda 21」 체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기후변화는 경제기획원및 동자부, 오존층파괴는 환경처, 산림 분야는 산림청, 토지자원은 농수산부식으로 총 22개 분야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각 관계부처별로 검토및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3차 준비회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각 분야별로 행동지침과 활동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나 우리의 현재준비상황으로서 얼마만큼 실천하며 맞추어 나갈 수 있을지는 걱정이 되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때 제출하기로 되어있는 「국가보고서」는 환경처가 주관이 되어 이미 만들어져 배포가 되었고, 정상회의를 감안하여 6월



**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된 만큼 정부의  
책무가 늘어났는데 앞으로  
10~20년후를 내다보며 환경  
문제에 대한 방향제시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회의때 고위 대표단의 파견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회의때 논의될 과제에 대해 우리의 대처방안과 입장정립이 잘 될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 실제로 개발우선정책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환경처와 외무부가 주축이 되어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관련기관의 협조면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과」중심으로 준비하는 상황이므로 미비한 점도 있는데 앞으로는 범국민적차원에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련분야가 합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 입니다. 실제의 일을 맡아하는 입장으로서 아쉬움도 있고 역부족도 느낍니다.

이상돈교수: 유엔환경개발회의는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떠하며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중 어느쪽에 근접하는가 하는 점도 다시 생각하여 보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책의 기본방침뿐만 아니라 시민과 환경단체의 참여등이 관한 문제도 생각해 볼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십시오.

권속표교수: 우리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까도 이아기한바와 같이 과거 오염규제나 감시 방식에서 이제는 사전방지로 바뀌었고 그러다보니 환경행정의 수요가 늘어났습니

다. 그래서 환경처의 행정만으로는 나라전체의 환경문제를 다루기가 어렵고 특히 '환경'과 '개발'을 놓고 부처간 의견이 상충되는 점이 많은데 이러한 인식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있습니다. 오염의 문제로부터 자연·자원까지 환경문제가 다양화된 만큼 정부의 대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법제도도 아직까지는 외국의 제도보다 낙후되어 있으므로 더욱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환경의식도 향상되어 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된 만큼 정부의 책무가 늘어났는데 앞으로 10~20년후를 내다보며 환경문제에 대한 방향제시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노용희교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정부에만 바라지 말고 국민들, 특히 민간단체, 즉 NGO (Non Government Organizations)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NIMBY(Not In My Backyard)현상도 문제지만 PIMF(Please In My Frontier)식의 시책이 지방자치 시작하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환경을 훼손·파괴시켜도 상관없다는 마치 60년대초 지도자 사고방식과 같은 생각을 지방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간 환경운동도 어떠한 사안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는 '대안 있는 투쟁'을 해야겠고 또 그런 여론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환경처와 외무부가 주축이  
되어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관련기관의  
협조면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노재식박사:저도 동감합니다. 민간운동단체가 대안있는 자세를 갖도록 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김에 동북아시아에서의 우리나라의 입장을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떠한 계기로 우리나라 주변국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SO<sub>2</sub>) 배출량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극동, 즉 일본, 한국, 중국, 대만에서 나오는 이산화황의 배출량은 2천만t이 되는데 그중 7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75% 차지하는 중국의 이산화황(SO<sub>2</sub>) 배출량의 50% 이상이 산동반도와 상해를 중심으로 한 중국중부지방 즉 황해연안 공업지대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산성비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제2의 스톡홀름회의를 한국에서 열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앞으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동아시아에서 대기오염문제를 서로 협의할 민간단체 기구설립이 필요합니다. 또 다음은 황해문제인데 인공위성사진으로 보면 황해삼각

주에서 배출되는 표사(漂砂)가 연간 2억t이 넘습니다. 이 표사는 1주일내에 제주도 북단까지 오는데 황해삼각주근처에서는 연간 4~6mm, 제주도 북서쪽에 와서는 연간 1mm로 이는 100년간 60cm가 됩니다. 이것은 인공위성사진이므로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한은 서해안개발을 하고 있고 북한도 서해안개발을 하고 있고 중국도 동해를 개발하고 있는데 폐수·폐기물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이 황해에 유입될 것지요.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는 대기오염문제뿐만 아니라 극동아시아의 지형, 환경오염등을 대비한 부서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권인혁대사: 지구환경문제를 본다면 사실 지구환경의 훼손은 선진국이 대부분 한것으로 1차적인 우선책임은 선진국에 있으며 지구환경보호에 동참은 하겠으나 환경보전을 구실로 개발을 방해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한 도와줘서 속히 경제발전을 이루도록 해달라는 것

이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개도국의 입장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추세가 환경 문제는 무역과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즉, 환경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수입금지를 하는 것 등인데 선발개도국이자 급속한 공업화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 지구환경문제는 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노박사님이 말씀하신 동북아 지역문제가 있는데 이지역은 '환경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UNEP가 주관이 되어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북아 해양환경실태 실무자 회의」를 했었습니다. 또, UNDP가 주동이 되어 두만강개발뿐만 아니라 동북아 환경문제가 검토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동북아의 대기·토양

문제가 UN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국교가 없는 중국이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개발우선의 국가시책으로 인하여 반응이 소극적인데 중국의 협조가 앞으로 정부의 관심있는 추진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며 UNCED에서도 하나의 시책으로 제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민간단체, 즉 NGO의 역할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발전에 비추어볼때 그 역할이 미흡합니다. 6월의 유엔환경개발회의 때에도 250여개의 NGO회원 1만여명의 참가가 예상되는데 과연 한국의 NGO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NGO 자체적으로도 전문성 결여나 투쟁적으로 치우친 행동양식 등의 문제가 있으나 정부나 사회단

체에서도 건전한 육성이 필요합니다.

노웅희교수: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문제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각종 지표상 20등 안에 진입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정치상의 위치에도 중점을 두어서 지구환경문제에 있어서 공업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며 적극적인 해결을 하고자 하는 리더격 역할을 맡아 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돈교수: 오랜시간동안 고맙습니다.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한 이정표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회에는 각종 협약에 관하여 전문가 몇분을 모시고 좌담회를 계속할 예정입니다.